

宋 在 容 議 員

“ 연구개발특구 확대방지와 첨단의료복합단지
유치에 온 행정력을 기울여야 . . . ”

유성구 제1선거구

유성구 제1선거구 송재용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영관 의장님, 동료 의원 여러분 !

그리고 150만 대전시민과 함께하는 행복한 대전 건설에 앞장서고 계시는 박성효 시장님과 미래의 인재 양성에 노력하고 계신 김신호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

본 의원은 오늘 중앙정부의 일관성 없는 대덕연구개발특구 지원정책과, 연이은 국책사업 유치실패에 따른 대전광역시 차원의 대응전략 마련 등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금의 참여정부는 '선택과 집중'을 강조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지역균형발전정책'을 추진하는 등 일관성 없고, 무원칙적인 정책을 펼쳐나가고 있습니다.

이런 일관성 없는 정책 속에서 일부 지역 국회의원들은 정부지원을 자기 지역으로 이끌어내기 위해 대덕연구개발특구 외 다른 지역에도 연구개발특구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법률 개정안을 발의 중에 있습니다.

이 같은 연구개발특구 범위확장 및 신설논의는 대덕연구개발특구뿐만 아니라 국가 전체의 미래성장동력을 잃게 하는 공멸의 지름길이 될 것입니다.

이는 대덕연구개발특구 지정이 2년밖에 지나지 않았고, 특구지정 및 개발에 따른 성과가 가시화되지 않은 시점에서 연구개발특구를 확대·지정하는 것은 분산투자에 따른 개발효과를 감소시킬 뿐만 아니라,

특구지정에 대한 당초 취지를 무색하게 만들고, 지금까지 투자되어 온 막대한 자금과 그동안 쌓아온 과학기술 노하우의 시너지 효과를 제대로 발휘할 수 없게 만드는 등 국가적으로나 지역적으로 상당한 역효과를 초래할 것이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지난 임시회 때, 「대덕연구개발특구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 발의 철회 촉구안을 채택하여 관련 부처에 전달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대전광역시도 연구개발특구의 지정·확대에 대한 외부의 압력과 정치적인 압박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이에 대응할 만한 특별한 논리나 대비책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며,

오히려 일부에서는 대전광역시가 다른 지역에 특구 지정·확대를 요구하는 빌미를 제공하지 않았느냐 하는 지적도 있었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작금의 상황에서 대전광역시가 다음과 같은 노력을 적극 기울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첫째, 향후 지금과 같은 연구개발특구 범위확장에 관한 논의가 더 이상 거론되지 않도록 대전광역시와 대덕연구개발특구지원본부간 대응논리 개발에 적극 나서야 합니다.

지금 상황에서 상정된 특구법 관련 개정안들이 올해 안에 쉽게 통과되기는 어렵다고 판단되나, 여전히 특구범위 확장에 관한 논의의 불씨는 남아 있는 상태입니다.

따라서 대전광역시는 대덕연구개발특구지원본부와 공조하여 대덕연구개발특구가 그동안 비판받아 왔던 기술 상용화 실적과 그에 따른 지역과급효과가 미흡하다는 점을 반박할 수 있는 대응논리 개발이 적극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를 위해 지금까지 대덕연구단지과 대덕연구개발특구를 통해 창출된 수많은 혁신기술과 그에 따른 국가적, 지역적 유·무형의 과급효과를 적극 발굴하여, 그 우수성을 국내·외적으로 적극 홍보하는 한편,

지역의 우수한 장점들을 발굴하여 대응논리를 개발함으로써, 그동안 대덕연구개발특구를 향했던 외부의 불신을 종식시켜야 할 것입니다.

둘째 「대덕연구개발특구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에 연구개발특구의 추가지정을 금지하도록 하는 특례조항이 신설되어야 합니다.

대덕연구개발특구가 목적인 성과를 내기 이전에는 대덕특구 이외의 연구개발특구를 지정할 수 없도록 하는 특례조항 신설 개정안을 이번 기회에 통과시켜야 합니다.

다행히도 우리 대전·충청권 국회의원들을 중심으로 이러한 특례조항 내용을 담은 개정 법률안이 현재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에 상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대전광역시를 비롯한 충청권 주민 모두는 대전·충청권 의원들이 발의한 특구 추가지정 반대 개정 법률안을 이번 기회에 통과시키도록 힘을 하나로 모아야 하며, 이러한 노력을 촉발시키고, 확산시키기 위한 정책적 노력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셋째, 대선주자들로부터 대덕연구개발특구의 집중적인 육성과 지원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확인 받아야 합니다.

지금처럼 외부의 압력과 정치적 논리 속에서 특구 범위 확대와 추가 지정이 지속적으로 논의된다면 우리 대전·충청권 역시 그에 상응한 대응전략을 수립해야 합니다.

그 전략 중의 하나가 차기정부로부터 대덕연구개발특구의 변함없는 육성지원정책을 약속받는 것입니다. 따라서 바로 있을 대통령선거에서 연구개발특구의 추가지정 반대와 대덕연구개발특구의 집중적인 육성 공약을 대선주자들로부터

이끌어 내는 정치적 활동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라는 것을 간곡하게 말씀드리면서,

이상 본 의원이 제안한 연구개발특구 확장 논의에 따른 대전광역시 차원의 대응논리 개발 등에 대해 시장께서는 어떤 견해와 대안을 갖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연이은 국책사업 유치실패에 관한 사항입니다.

지난 11월 13일 산업자원부가 로봇랜드 유치사업 예비사업자로 인천광역시와 경상남도 마산시를 결정함에 따라, 대전광역시는 지난 6월 자기부상열차 실용화노선사업에 이어 금번 로봇랜드 유치사업마저 실패하게 됨으로써 150만 대전시민 모두에게 큰 실망감을 안겨 주었습니다.

지금과 같은 연이은 국책사업 유치실패의 근본적 원인은 대전광역시의 유치전략과 사업계획 및 방향설정 등에 잘못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내년에 있을 첨단의료복합단지의 성공적 유치를 위해 다음과 같이 제안하고자 합니다.

첫째, 대전광역시는 지역특성을 반영한 차별화된 유치전략 및 논리개발이 적극 필요합니다.

산업자원부 발표 자료에 의하면 “대전광역시는 대덕연구개발특구를 중심으로 한 연구기반을 너무 강조한 나머지 고객 중심의 로봇랜드 및 테마파크 구축이라는 사업목적 측면이 희석되었다.” 라고 밝히고 있어 대전광역시의 유치전략 및 정보력 부재가 유치실패 원인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금번 로봇랜드 유치실패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대덕연구개발특구는 이제 더 이상 국책사업 유치를 위한 핵심 전략이 될 수 없으며, 우리 시가 지닌 훌륭한 연구 인프라 중 하나의 장점에 불과하다는 것을 인식해야 합니다.

만일, 대전광역시가 또다시 대덕연구개발특구의 연구개발 인프라만을 내세운 안일한 유치전략을 펼친다면, 또 다른 실패를 겪게 될 것이 자명합니다.

따라서 대전광역시는 로봇랜드 유치실패에 대한 철저한 분석을 통해 대덕연구개발특구 외 각각의 국책사업 특성에 맞는 지역의 장점과 우수성 등을 적극 발굴하는 한편, 차별화된 전략 마련으로 내년에 있을 첨단의료복합단지 유치준비에 적극 나서야 할 것입니다.

둘째, 연이은 국책사업 유치실패에 대한 철저한 원인 분석과 그에 따른 대책마련이 필요합니다.

대전광역시에서 밝히고 있는 연이은 국책사업 유치실패 원인을 종합해 보면, 행정중심복합도시의 충청권 입지에 따른 중앙정부의 역차별, 석연치 않은 심사과정과 선정과정, 정치적 논리의 개입 여부 등을 실패 원인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대전광역시는 국책사업 유치실패 원인을 외부환경의 탓으로 돌리고 있습니다.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대전광역시가 자기부상열차 실용화노선사업 유치실패 이후, 그에 따른 정확한 실패원인 분석과 정부대응 등 사후처리 및 관리가 부족했고, 그로 인해 로봇랜드 유치사업에서 똑같은 실패를 자초했다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시장께 묻고 싶습니다. 대전광역시는 지난 6월 자기부상열차 실용화노선사업 유치실패 후, 정확한 실패원인을 분석하셨는지?, 실패원인을 분석했다면 주된 원인이 무엇이었는지?, 소상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본 의원은 연이은 국책사업 유치실패의 정확한 원인을 점검·분석한 후, 이를 바탕으로 내년에 있을 첨단의료복합단지 유치과정에 중요한 이정표로 삼을 것을 제안합니다.

셋째, 대전광역시는 미심쩍은 국책사업 선정과정에 대한 정부의 명쾌한 해명을 받아내야 합니다.

지난 6월 자기부상열차 실용화노선사업 유치지역 결정 후, 유치과정에서 탈락한 지자체들을 중심으로 건설교통부의 미심쩍은 심사과정과 선정과정에 대해 문제를 제기한 바 있습니다.

이번 로봇랜드 역시 지자체들의 유치 열기가 너무 높다는 이유로 최종 프리젠테이션을 일방적으로 연기한 점, 최초 단수사업자 선정원칙이 무시된 채 복수사업자가 선정된 점, 마산시의 사전낙점 의혹 등 산업자원부의 심사과정과 선정과정에 대한 문제점들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대전광역시는 금번 로봇랜드 심사 및 선정과정에 대한 정부의 명쾌한 해명을 받아냄으로써, 금번 산업자원부의 심사와 선정과정에서 잘못된 점이 있다면 분명하고, 정확하게 바로잡아야 할 것이며, 미심쩍은 심사과정에 대한 시민의 궁금증을 한 점의 의혹이 없도록 풀어 주어야 합니다.

아울러 유치과정에서 부족한 점이 무엇이었는가를 되돌아 볼 수 있는 타산지석(他山之石)의 기회로 삼아 내년에 있을 첨단의료복합단지 유치에 만전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 본 의원이 제안한 국책사업 유치실패에 따른 대전광역시의 대책마련 등에 대해 시장께서는 어떤 견해와 대안들을 갖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서남부권 IC 신설에 관한 내용입니다.

광역도로망 추진과 함께 유성 IC와 서대전 IC의 유출입 교통량이 점차 증가되고 있는 현 시점에서 서남부권 개발사업과 대전종합유통단지의 건설은 인구유입과 물류간선망 확보라는 긍정적인 효과도 있지만,

교통량 증가에 따른 교통 혼잡과 물류비 증가 등의 문제를 발생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특히 서남부권 개발사업과 인근 학하지구 도시개발사업은 15만 8천명의 인구수용 계획을 갖고 있으며, 이러한 대규모 택지개발사업은 서구와 유성구 일원을 비롯한 주변지역의 교통량을 큰 폭으로 증가시킬 것입니다.

또한, 동서로상의 월평공원을 관통하는 터널이 완공되어 서남부권 도로망과 연결될 경우, 인근의 내동, 가장동, 변동, 괴정동을 비롯한 태평동 일대 지역주민 10여만 명과 서남부권 유동인구 20여만 명 등을 감안한다면, 교통 혼잡은 더욱 가중될 것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장기적인 안목에서 서남부권 개발사업과 대전종합유통단지 건설에 따른 교통혼잡 및 물류비 증가 문제들을 해소하고, 교통량을 효과적으로 분산시킬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현재 호남고속국도 유성 IC와 서대전 IC 중간지점에 동서로 축과 만나는 IC를 신설할 것을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는 어떤지 묻고 싶습니다.

또한,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IC 신설에 따른 사업비 확보 차원에서 대전광역시의 정치적 논리와 접근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에 대한 시장의 생각과 대안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본 의원의 질문을 경청해 주심에 감사드리며, 대덕연구개발특구 활성화와 국책사업의 성공적 유치를 통해 우리 대전이 한국의 미래를 선도하는 중심도시로 도약할 수 있기를 기대하면서,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